

# 역사비평 124

2018 가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 ‘사이비사학’ 비판을 비판한다

테이 정(Tay Jeong)

### 서론: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의 부상과 영향

2015년 고대사 파동 이후 ‘사이비사학’이란 말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소수의 학자들이 쓰던 말이 이처럼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정계 및 언론계에서 벌어진 일부 대중 논객들의 폭력적인 비난과 그에 따른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들의 잇단 무산에 대한 학계의 반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재야 학자들의 무리한 공격에 대한 제도권 내 다수 학자들의 강한 반응이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광범위한 사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이비’라는 말의 부상이 한국 사회의 고대사 갈등 속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그저 전문 학자들이 다소 거친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사실 이 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대 역사지리에 관한 대립에서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세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어떤 연구가 한국 고대 역사지리의 시공간적 범위를 정설보다 크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질적 수준미달의 지표로 인식하게 한다. 둘째,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사용은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을 바라보는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학설들을 지탱하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에서 보이는 각종 간접적인 증거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사용은 이 간접적인 증거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논쟁의 이데올로기화에 기여한다. 논제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논쟁의 상대가 특정 정치적 이념에 이끌렸음을 설정하고 그 이념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를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사용이 불러오는 세 가지 효과 모두 자세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그 규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 가지 모두 얼핏 보기에 무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인식적·실용적·윤리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특히 세 번째 언급한 ‘이데올로기화’는 단기적으로 그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세 장에 걸쳐 각각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다.

## 1. 낱말 뜻과 지시체 사이의 혼선

어떤 사학이 ‘사이비’라는 것은 그것이 역사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 연구의 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어떤 대상

을 직접 가리키는 용도보다는 미리 구획된 대상에 일정한 성질을 부여하는 용도로 더 적합하다. 비판하고 싶은 특정 저작이나 연구자를 미리 가리킨 뒤, 그에게 “전문 연구가 요구하는 질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성질의 부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떻게 질적으로 수준미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경량은 그가 쓴 글의 한 부분에서 이덕일의 주장이 전문 연구의 질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하며 그를 ‘유사역사학자’라고 규정했다.<sup>60)</sup> 여기서 ‘유사’라는 수식어는 이덕일이라는 미리 구획된 대상에 일정한 추상적 성질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대상이 미리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을 지시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이비’라는 수식어가 내포하는 “질적으로 수준미달”이라는 성질이 실제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사학’이라는 표현을 특정 대상을 지칭할 용도로 사용하려면 가리키는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인지되는 별도의 기준을 끌어들여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매우 추상적인 질적 기준과 등치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최근 정권 교체 이후 여권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적폐”, 즉 “그동안 쌓인 잘못”이라는 매우 모호한 도덕적 표현을 현재 한국 사회의 특정 대상을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쓰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국정농단과 각종 부정에 연루된 사람 및 단체들”이라는 별도의 보다 명확한 기준에 암묵적으로 의거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적폐’에서 말하는 그 ‘폐단’ 내지는 ‘잘못’이란 것이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자체만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대 역사지리 분야의 갈등 속에서 부상하였으며, 화자가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지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학계가 신속히 “사이비사학의 논리를 비판”했다든지, “인접 분야 연구자들과 (...) 타 전공 전문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에 [유사 역사학에] 동조하고” 있다든지 하는 용례에서 이 낱말의 지시적 용법이 뚜렷이 관찰된다.<sup>002</sup> 그러나 이 말은 지시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에게 지시의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별도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서 특기할 점은 역사지리의 제 분야에서 주류설과 비주류설이 대립해왔다는 것이다. 근대적 고대사 연구가 시작된 이래 대다수의 전문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주류 학설에 반해 그와는 다른 배경 가정과 사료 해석으로 훨씬 더 큰 영토를 고집하는 역사지리 연구가 늘 소수 존재해왔다. 이렇게 역사지리 분야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연구 내용적 구분이 존재하는 현실 위에 진짜와 사이비라는 또 다른 구분을 짓는 것은 그 자체로 개념적인 등치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사이비’라는 말이 지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가 지시하는 대상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류에서 토론되는 범위보다 큰 영토를 그리는 소수설”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암묵적으로 결합될 여지가 농후하다. 간단히 말하여, ‘사이비사학’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영토를 크게 그리는 소수설’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유추는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세 종류의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첫째로, ‘사이비사학’이란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별도의 논증 없이 실명 거론한 발언들이 있다. 2016년 『역사비평』지의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비판”이라는 연재에서 기경량은 윤내현, 신용하, 복기대, 이덕일을 별도의 논증 없이 한데 묶어 사이비로 규정하였다.<sup>003</sup> 이들 사이에서 자명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은 고대 역사지리에서 영토 확장적 소수의견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만약 ‘사이비’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대로 순전히 질적 기준만을 적용했다면 왜 굳이 이들만 한데 묶어 언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의 연구가 전문 연구의 질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비판과 논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인식은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의 2018년 신년 간담회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2년간 상고사 토론회를 했지만, 역사학과와 유사역사학과 사이에 학문적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는데, <2015~2017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토론회>에서 양측 패널이 나뉜 기준은 고조선과 한사군의 역사지리 분야에서 주류의 범위 안에 드는 학설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것이었다.<sup>004</sup>

둘째로, 큰 영토를 그리는 어떤 소수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별도의 논증 없이 ‘사이비’라는 수식어의 대상으로 통칭한 경우이다. 강진원은 『한겨레21』의 “진짜 고대사” 연재글에서 “전문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홍산문화가 한국사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언급하며, 이들 연구자들이 “홍산문화는 우리 역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사이비역사의 ‘고대사 판타지’와 무관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sup>005</sup> 그러나 “홍산문화가 한국사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할 그 어떠한 논리적 필요성도 없으며, 실제로 한국사와 홍산문화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는 소수의

전문 학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유추되거나 논증된 것도 아니다. 역사지리적 소수설인지 여부를 진짜와 사이비사학을 가름하는 지표로 삼고, 홍산문화와 한국사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연구자들을 '사이비'라고 칭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셋째로,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에 내포된 '전문 역사 연구의 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은 다양한 결론의 연구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정설에 비해 한국의 고대사 범위를 크게 그리는 소수설에만 쓰이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주류의 범주 안에 있으나 사료의 해석과 유추의 질이 조악한 논문들이나 한국사의 시공간적 범위나 독창성을 정설에 비해 유난히 작거나 낮게 보는 연구들 등, 얼핏 전문 역사 연구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그에게 요구되는 질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연구들을 연구사적으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되거나 강하게 비판될지언정 '사이비사학'이라는 수식어로는 거의 지칭되지 않고 있으며, 이 수식어는 한국 고대사의 범위를 정설에 비해 확대하여 묘사하는 비주류 학설들과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상의 사례로부터 '사이비사학'이 그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는 영토 확장적인 소수설을 지칭하는 말로써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재차 추론하게 된다.

그렇다 한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연구가 주류보다 확연히 고대사의 범위를 크게 잡고 있는 소수설일 경우 그를 사이비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직관적·이론적 매력기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계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론이 소수 이론보다 더 옳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며, 그 차이가 현저할 경우 '정설'이라 부르며 선택적 인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역사를 연구와 서술로 나누

어볼 때, 연구는 사실과 거짓이 비교적 뚜렷하게 판별되는 과학의 영역이며, 서술은 일정한 주관적 임의성이 인정되는 문학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많은 역사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sup>006</sup> 역사지리는 서술적 주관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덕에 전문 학자들의 의견이 일정 범위 내에서 모아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모아진 범위 내에 거의 확실하게 진실이 있지 않겠는가, 일반적인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보다 큰 영토를 묘사하는 설들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과학 연구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과학적 혁명의 예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에서 익히 알려진 혁명들이 새로운 방법론이나 경험적 증거에 힘입은 데 반해, 한국 고대 역사지리 연구의 소수 학설들은 거의 모두 이미 알려진 사료에 익숙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지 독특한 사료의 해석과 배경 가정들을 통하여 정설에 도전할 뿐이다. 이미 사료의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역사 연구에서 새로운 역사적 지식의 생산은 오로지 새로운 사료의 발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sup>007</sup> 한국 고대사 및 고대 역사지리 연구에서 주류의 토론 범위에서 벗어난 소수설들이 진지한 학문적 대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이비사학'이라는 주장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나름대로의 직관적 및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비주류 연구들을 역사적 지식의 탐구와는 격리된 정치적·치유적 성격으로만 인식하는 관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008</sup>

한국 고대 역사지리 분야에서 영토 확장적인 비주류설들이 역사 지식의 진보와는 인연이 없는 사이비라는 인식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과거 '성적'을 알아보는 일일 것이다. 천동설과 창조론 같은 분명한 비과학은 그것이 소수 패러다임으로 전략한 이래 다수설의 압도적



인 예측 및 설명의 성공에 반해 그 어떠한 성과도 설득력도 없이 고립되어 왔으며, 산소와 플로지스톤의 대립처럼 과학의 역사에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판명된 패러다임 대립의 경우에도 전자가 정설로 굳어진 뒤 패자는 첨단 과학 연구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였다. 최근 교육 커리큘럼에 틀린 학설로 명기할 당위성이 논쟁되었던 지구 온난화와 인간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학설의 경우에도(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정설이다) 정설을 부분적으로 끌어당긴다거나 그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대신 모든 면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한다.<sup>009</sup>

그런데 해방 후 한국 고대사 연구를 돌이켜보면, 기존에 비합리적일 만큼 확장적이고 과장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비주류 위치비정들이 연구와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주류 학술 담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거나 심지어 새로운 다수 학설로 자리매김하는 현상들이 유의미하게 관찰된다.<sup>010</sup> 연구사적으로 비주류의 도전이 가장 강했던 분야 중 하나인 고조선의 역사지리를 보면, 중심지와 지리적 범위, 그리고 주요 강의 위치와 같은 주제들에서 1990년대 이후 학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까지 민족사학 계열의 과장으로만 여겨지던 학설과의 유의미한 수렴이 수반되었다. 기원전 4, 5세기 이전 고조선이 요서 지역에 존속했다는 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부 문헌 자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뢰하기 어려운 소수 의견으로만 인지되었으나, 근래 다수의 전문 학자들에게 인정되는 학설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과 고조선의 경계인 패수(溟水)의 위치는 이병도가 해방 전 “양 하천(溟水와 溲水)을 제멋대로 요동 방향의 어느 강에다가 빗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sup>011</sup> 못 박은 이래 본인을 포함한 제도권 연구자들에게 논외로 치부되었으나, 1990년대 고조선 역사지리 연구가 활성화된 이래 혼하설이 국내 연구자들에게 많은 지

지를 받게 되었으며, 기존의 청천강설은 도리어 퇴색한 느낌마저 든다. 물론 새로운 고고학 자료와 『전한기(前漢記)』 등 기존에 참고되지 않던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힘입은 바가 크나,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폈던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들의 역사적 추론과 역사지리적 배경 가정들의 합리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많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일제시대의 학설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여긴 주류 학계의 오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왕검성의 위치에 관해서도 재평양설이 1990년대 이전의 북한을 제외한 모든 제도권 학계에서 거의 이견 없이 정설로 인정되어왔으나, 2000년대 이후 국내 몇몇 연구자들이 왕검성 재평양설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요동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최근 열린 제41회 전국고고학대회에서 정인성도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왕검성 재요동설은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자들이 즐기치게 주장해온 학설이다. 이것이 지난 이십여 년에 걸쳐 국내 제도권 학계에서 조심스럽지만 꾸준한 조명을 받으면서 더 이상 합리적인 역사적 추론에 완전히 어긋나는 가설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연구사에서 관찰되는 비주류 학설의 부분적인 성공 사례는 그것을 일관되게 역사적 지식의 생산과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풀려진’ 사료 해석과 ‘터무니없는’ 위치비정으로 치부되었던 비주류 학설의 일부가 합리적이거나 적어도 과거 통용되던 정설에 비해 확연하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류 학설이 역사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설에 비해 훨씬 큰 영토를 그리는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 전통은 미신적·종교적 세계관 및 도태된 과학적 패러다임 같이 분명한 비과학이

나 사이버과학과는 달리 나름대로 지식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세 가지 잠재적 반론에 간단히 대답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 이제는 식민사학의 왜곡을 완전히 극복했으므로, 고대사 및 고대 역사지리의 제 분야에서 주류 담론이 소위 ‘민족사학’ 계열의 비주류 연구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생산적으로 참고할 여지는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식민사학 극복을 과거의 일로만 여기는 인식은 고대사학자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sup>012</sup>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이병도를 비롯한 한국의 고대사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의 잘못된 연구를 비판하거나 거리를 벌린 예나<sup>013</sup> 낙랑군 재평양설과 같은 주류 학설이 식민 시대 이전부터 이미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sup>014</sup> 일부 대중사학자들이 내미는 투박한 비난은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한 지난 시대의 잘못된 지적 유산의 존재 유무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고대사의 몇 가지 주요 논제들에서 주류 학계의 연구가 그동안 논의 취급되던 비주류 학설에 유의미하게 근접했다는 사실로부터, 과거로부터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아직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한 역사적 가능성들의 존재를 귀납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해방 후 고대사의 여러 분야에서 식민 시대로부터 내려온 일정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성찰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있어왔다.<sup>015</sup> 물론 지목된 특정 식민지적 왜곡이 정말로 왜곡인지 아니면 왜곡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인지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제도권 학계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는 사실은 식민사학 극복이라는 과제를 먼 과거의 일로만 여기는 관점의 설득력을 떨어뜨

린다.

첫째 반론이 한국 주류 학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에 기초한 것과 반대로, 둘째 반론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배형일(Pai Hyung-il)은 해방 후 한국 학자들이 고대사제 분야에서 한국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온 사실로부터 그들이 전체적으로 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역사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016</sup> 심재훈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조선 역사지리 연구를 “기둥 몇 개도 없이 집을 짓는” 것에 빗대며 그 학문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동시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세우고 싶어 하는 연구자들의 욕구[가] (...) 무리한 해석을 낳게” 하였다며 학자들이 역사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sup>017</sup>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요동패수설 같은 학설은 그 학문적 신뢰성이 부족한 한국 학계에서 최근 상당한 지지를 얻었을 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비주류 연구가 거둔 ‘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한국 고대 역사지리 연구에서 영토 확장적 비주류 학설을 사이버사학의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없다는 이 장의 논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 내에서 주류 학계가 권위 있는 학술 담론의 논란 없는 참여자(즉 ‘진짜’ 사학)로 인정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가 주류에 비해 더 역사적 지식에 근접하였거나 나름대로 기여한 예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학술 담론 안에서 그를 일괄하여 사이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뒷받침된다. 한국의 주류 역사지리 연구가 정말로 역사적 진실에 지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즉, 정말로 ‘진짜’ 사학인지), 혹자가 말하듯이 북한 학자들이나 소위 ‘민족사학’ 계열의 연구

자들에 비해 정도만 덜할 뿐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부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로, 그렇다면 현 시점에 한국에서 고대 영토를 크게 그리는 비주류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정확히 누가 사이버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열거하라는 반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글은 그 누구를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사이비’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비판이며, 영토 확장적 비주류라는 연구 가설적/수적 기준이 사이버사학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질적 수준미달의 지표로 쓰일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도 쓰이고 있으나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 비주류 학설의 부분적 성공 사례는 고대 역사지리 분야에서 ‘비주류 →사이비’라는 도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납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귀납적 추론이 틀렸으며, 현 시점에서 어떤 연구가 영토 확장적 비주류라는 사실이 사이버사학의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를 꼭 사이버라고 볼 수 없다면, 후자로 쓰고 암묵적으로 전자를 가리키는 것은 일정한 인식적 비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그 비용이란 무엇인가? 만일 실제로 진실에 가까운 비주류 가설이 있다면 그를 사이버로 칭하여 사전에 배척하는 것은 당연히 역사학적 오류라는 인식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도,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는 주류설의 소진되지 못한 약점들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위하여 쓰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도학에 의해 제기된 낙랑군의 교차 시점에 대한 의문도 기존의 시공간적 프레임과 잘 맞지 않는 사료들이 많다는 사실에 의거한 것으로, 검토된 문헌 사

료의 상당 부분이 낙랑군 재평양설을 부정하던 남북한의 소수설들의 논거와 겹치거나 그를 새롭게 응용한 것이었다.<sup>018</sup> 물론 낙랑군의 교차 시점에 대한 이러한 이의 제기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소진되어야 할 역사학적 가능성들 중 하나이다. 이처럼 주류 학설의 부분적 수정이 주장된 경우가 아니라도, 비주류 연구의 도전이 새로운 역사적 지식 생산의 동력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낙랑군 재요서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인 문헌 해석을 한층 더 세밀한 문헌 사료 비판의 발판으로 삼은 연구도 있었으며,<sup>019</sup> 정인보에서 시작하여 낙랑군 재평양설을 부정하는 비주류 연구자들에 의해 줄기차게 주장되던 봉니 조작설을 봉니의 실물 및 발굴 과정의 세밀한 검토와 연결시킨 연구들도 있었다.<sup>020</sup> 특히 정인성은 낙랑군이 평양이 아닌 요령에 있었다는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으나 봉니와 예관을 비롯하여 낙랑군 평양설을 지지하고 있는 각종 고고학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하였다.<sup>021</sup>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사이비’라는 말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참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잘 살펴보면 생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비주류 연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2.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의 유리(遊離)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고대사 논쟁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극복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사이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토론보다는 제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말로 상대를 지칭하는 행위는 상대가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제압되는 것을 그 실용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소위 '사이비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회적 힘은 거의 비전문가들의 지지로부터 오고 있는데, 과연 '사이비'라는 말을 통한 공격이 비전문가들을 그들로부터 주류 학계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특히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 최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비전문가의 경우를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학설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적으로 책임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거', 즉 간접적인 증거를 참고하게 된다. 사회인식론 분야에서 전문가 이견에 대한 중대한 연구로 인정되는 골드만(Goldman)의 2001년 논문은 비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를 변증법적 역량(Dialectical competence), 다른 전문가의 의견(The opinion of other experts), 편향(Biases), 그리고 과거 성적(Past track records)으로 분류하였다.<sup>022</sup> 이 가운데 첫 번째 '변증법적 역량'은 두 전문가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의 양태로부터 각각이 내세우는 학설의 합리성을 유추하는 것을 뜻한다. 논쟁에서 한쪽이 더 높은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그쪽이 지지하는 가설에 대한 신뢰를 늘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논쟁되고 있는 학설이 학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을수록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편향'은 논쟁의 참가자가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줄인다는 것이며, 네 번째 '과거 성적'은 논쟁의 참여자들이 과거에 부딪

힌 기록이 있고, 그 승패나 우열이 알려졌다면 승률이 높은 쪽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낸다는 것이다. 네 가지 항목 가운데 '다른 전문가의 의견'과 '과거 성적'은 토론 전부터 비교적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변증법적 역량'과 '편향'은 토론자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내비치게 된다.

주류 학계의 대응 자세가 비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에서 점수를 잃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실례를 두 가지 살펴보겠다. 최근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복기대와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의 고구려 도읍지 및 고려 북계 연구가 있을 것이다. 복기대와 연구팀은 사료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리왕설로부터 산상왕설까지 많은 주장이 제기되었던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천도 시기에 대해 고국원왕 설을 제기하는 동시에, 삼국사기의 황성(黃城)을 집안으로 비정하였다.<sup>023</sup> 이에 더하여, 환인-집안-평양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큰 지리적 틀을 깨고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요양으로 비정하였다.<sup>024</sup> 이 연구자들은 고구려 평양을 요양으로 비정한 연구를 고려 역사지리로 확장하여 고려의 북계가 기존의 압록-원산만이 아닌 요동에 있었으며, 초기 압록은 요하이고, 초창기 서경은 요양이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sup>025</sup> 이 연구들은 대학에서 전문 역사 연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많은 대중적 관심 속에 이루어졌지만,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은 침묵으로 대응했다. 일반적인 개별 연구논문의 경우 저자의 간과 내지는 논의의 범위를 조절하기 위한 생략일 수 있겠으나, 사료와 논제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연구논문들이나 관련 분야의 리뷰 성격이 짙은 출판물에까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시를 강하게 시사한다.<sup>026</sup>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중세사학회에 의해 정치적 제압의 대상으로 취급된 바도 있다.<sup>027</sup>

이 연구의 내용과 학계의 대응을 꼼꼼히 살펴본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일면 그럴 듯하게 정설의 약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우위 및 대등한 경쟁을 주장하고 있는 이 가설들이 관련 주제를 논하는 학술지면에서 침묵으로 대응되고 있는 까닭을 질문하게 될 것이다. 만약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주류의 범주로 인정되는 학설들이 변증법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혹시 타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적극적 논박이나 비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 주류의 지적 오만을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일부 재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학계 내부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추정이 쉽게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학계의 깊은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연구사적인 분단에서 비롯된 파벌 및 편향의 존재를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의심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5년 고대사 파동 이후 비주류 학설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비판을 담은 저서들이 출판되었는데, 그중에는 고대 역사지리 갈등의 한 가지 주요 논제가 되어왔던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에 반대하거나 그를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고대사 논쟁을 관찰하는 비전문가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역사비평』 연재에서 장미에는 국사 교과서에 백제 요서 진출이 표기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로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확실한 정설이 없는 주제에서 한 가지 설을 교과서에 사실로 기술하는 것

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하나, 저지는 곧이어 이러한 기술이 백제가 “한반도 남부에 국한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중국 대륙과 왜까지 그 영향력을 뻗친 강력한 국가로 이미지화했던 것”이며 “결국 사이버역사학 측이 만들고자 했던 우리나라 고대사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sup>029</sup> 그런데 백제가 강력한 국가였고, 중국과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뻗었다는 주장이 왜 굳이 사이버역사학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백제의 해외 진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저울질하고 있는 비전문가로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왜 특정 가설이 이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비슷한 예로, 비주류 학설들의 높은 대중적 영향력에 맞서 “학계의 주장을 시민사회에 직접 전하기 위해”<sup>030</sup> 기획된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강연 자료집에는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과 관련하여 그 사실성에 반대하는 기사가 실렸다.<sup>031</sup> 백제의 요서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긍정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학계의 주장”을 전하겠다는 강좌 시리즈에 확고하게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한 논문만 포함된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편성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영토 확장적 비주류 역사지리와의 대립적 상황을 의식하여 사전에 설정된 방향성이 암묵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대사 논쟁과 관련하여 학계의 여러 비중 있는 학자들이 합심하여 내놓은 기획들에서 백제의 해외 진출에 관한 부정적 시각만이 대변된 것을 본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는 학계에 퍼져 있는 일정한 ‘편향’의 존재를 의심해볼 것이며, 그러할 경우 ‘백제가 해외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던 기록들은 정말 다 거짓인가?’에 관한 논제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쪽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예는 모두 전문가 사이의 이견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자 하는 비전문가가 주류 학계가 대변하는 가설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앞의 예에서는 학술 연구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높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역사지리적 비주류 연구에 대한 학계의 무시와 배척이, 뒤의 예에서는 학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가설 중 지리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가설에 대한 선택적인 대변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이 글의 주제에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빈번한 사용이 학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복기대와 인하대 연구팀의 주장이 학문적 침묵으로 대응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부상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이비사학’으로 지칭된 대상은 그 낱말의 정의상 진정한 학문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학술 담론에서 논평할 당위성이 떨어진다. 앞 장에서 논증하였듯이 ‘사이비’라는 말은 암묵적으로 한국 고대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비주류 연구를 가리키는 용도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설의 논쟁 범위를 벗어난 역사지리적 가설을 들고 나올 경우 그것을 심각한 검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대사 논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한국의 고대사학계를 대변하여 내놓은 저서들에서 백제의 해외 진출 기록 해석에 일정한 방향성이 관찰되는 것 역시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감정적으로 번진 연구 집단 사이의 대립이 타자로 규정된 상대로부터 원심력을 발현시키거나 내부적 유연성을 경직시키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sup>032</sup> 모두에게 ‘사이비’로 규정된 상대가 있을 경우, 그에 겹치거나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

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로 인해 역사의 연구와 토론에서 은근한 편향이 생길 개연성도 발생하는 것이다.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의 사용이 상대가 비전문가들에게 받는 지지를 떨어뜨려 그를 제압하겠다는 실용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면, 여기에 일정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류 학자들이 갈등의 상대, 즉 소수학설의 견지자들을 사이비로 부르면 부를수록, 논쟁을 바라보는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는 전자에 대한 신뢰를 줄일 간접적 증거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에는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만 있는 것은 아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 3. 비판의 이데올로기화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은 고대사 논쟁의 이데올로기화를 촉진한다. 사이비사학이라는 지칭으로 학문적 타자를 구획하고 그의 주장이 수준미달의 거짓임을 전제하는 경우, 그들이(특별히 머리가 나쁘거나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아니는데) 대체 왜 말도 안되는 오류만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경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은 지식의 사회학적 원천에 대한 논의로 변질 수밖에 없으며, 상대의 잘못됨을 특정한 이념적 편향으로 설명할 강한 동기가 마련된다.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이 역사적 비판의 이념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첫 번째 예로, 2016년 『역사비평』지에 3회에 걸쳐 실린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사학 비판”이라는 연재가 있다. 학계에서 ‘사이비’라는 말이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용되

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이 연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사 논쟁에 관한 이념적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여 편의 논문 가운데 영토 확장적 비주류 학설에 구체적 반론을 제기하는 데 비중을 둔 논문은 낙랑군 요서설에 반해 기존의 평양설을 재차 확인한 이정빈과 안정준의 논문뿐으로 보인다.<sup>033</sup> 더 많은 수의 논문들이 영토 확장적 소수설들과의 공통된 발판을 찾아 구체적 논제로 시야를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줌-아웃하여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에 집중하였다. 특히 그동안 많은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의 사상적 배경이 된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민족주의가 정치권력에 의해 어떻게 역사를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데 이용되는지,<sup>034</sup>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며 역사교육을 부당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sup>035</sup>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여 파쇼 정치에 부역하는지 설명하고 비판하였다.<sup>036</sup>

2016년 10월 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요서 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 학회 발표에서도 ‘사이비’라는 말의 사용과 이념적 비판의 부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변이적인 비주류 학설들의 도전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녔던 이 학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2부에서 발표된 네 논문들이 실증적 성격이 짙었던 것과 달리 1부에서 발표된 두 논문은 모두 정치적·이념적 비판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하일식은 ‘유사역사’라는 말을 시종 지시적 용법으로 사용하며 그에 해당하는 대상들로서 민족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했던 역사단체들과 군사독재 정권 및 박근혜 정권과 연계하여 활동했던 역사단체들을 열거하였다.<sup>037</sup> 그리고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종종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며 민족주의, 전체주의, 애국주의가 역사 분야에 적용될 경우 어떻게 역사를 부풀릴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김종일은 ‘유사역사’라는 용어를 민족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과 암묵적

으로 연결시켜 규정하는 동시에, 과도한 민족주의가 역사 연구와 결합되어 얼마나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나치 독일의 사례를 들어 비판하였다.<sup>038</sup>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사이비(또는 유사) 사학'이라는 말이 1부의 두 논문에서 매우 빈번하게 쓰인 데 반해 나머지 실증적 성격의 논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용어의 사용이 고대사 논쟁의 정치이념화에 기여한다는 본 장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놀라운 발견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비 사학이라는 용어가 촉발하는 이념적·정치적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윤리적 함의를 갖는가? 특히 2015년 이후 학술지와 학회 및 언론 연재에서 꼬리를 물고 표출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념적 비판들은 한국 고대사 논쟁의 현실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한 기능부터 소거해 나가 보겠다. 우선 고대사 분야의 지식을 진보시키겠다는 인식적 기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역사적 지식의 진보는 오로지 구체적인 사료에 의거한 실증적인 검토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역사의 연구와 서술에 관한 이념적·사회적 분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환단고기를 만들어냈는지, 민족의 영광을 세우겠다는 이념적 목적을 역사적 진실의 추구보다 앞세우는 일부 대중작가 및 종교인들이 어떻게 정계와 언론계에 로비를 했는지, 또는 나치 독일에서 과시즘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정확한 역사를 생산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낙랑군의 시공간적 범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고조선의 중심지와 세력권이 어디까지였는지, 백제가 한반도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고구려의 도읍지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등을 알아내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일차 사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비주류 학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을 설득하는 것과는 별 인연이 없다. 추상적인 단계로 좁아들어서 정

치적 비판을 가하는 행위가, 설령 질이 낮을지언정 구체적인 역사적 추론에 근거하여 의견을 결정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민족주의적 고대사 연구에 대한 이념적 비판들은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지는 않은가?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다. 비주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이념적 비판들은 지적 현상의 비인식적 원인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사회학적 연구로 분류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지식사회학적 연구가 비전문가가 전문 역사학자들 사이의 이견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sup>99</sup> 비주류 사학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 논문들이 비전문가들이 비주류 고대역사지리 연구를 지지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앞 장에서 소개한 골드만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에 대한 이념적 비판은 비주류 연구자들의 '편향'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전문가가 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매개로 한 비주류 사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들이 대중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설득이라고 보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사이비'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한 정치적 비판논문들은 그 뚜렷한 무성찰성(non-reflexivity)으로 인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식사회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가깝다.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그 역사적 근원과 이론적 개념부터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공격으로서, 상대의 주장을 거짓으로 전제하고 그 거짓됨을 정치적·경제적·종교적 편향과 같은 비인식적 왜곡요소들로 설명하지만,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믿음의 사회적 연원에는 무관심하다.<sup>940</sup> 지식의 사회적 연원을 상대방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인식적 우위를 과시하는 것은 그를 관찰하는 비전문가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주입하려 드는 행위에 가깝다. 이는 한국 다수의 제도권 학자들이 서너 대의 사제 관계로 식민사학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가하는 일부 대중사가의 행동과 대칭적으로 닮아 있다. 사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한국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는 비전문가들이 알아둘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역사적·정치적 근원을 무시한 채 본인들(일부 대중사가들)에게 유리한 대로 비판 상대의 특정 사회적 배경만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비전문가들에 대한 바람직한 설득이라고 볼 수 없다. 성찰성이 결여된 이데올로기적 공격은 논쟁의 참여자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역사에 관심을 가진 비전문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설득이 될 수 없다.

‘사이비사학’이라는 낱말을 사용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낱말의 뜻과 그것이 지칭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부정함이 생긴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문 첫 장에서 말한 논리와도 같아서, 말로는 ‘사이비사학’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별개의 개념인 민족주의 사학(혹은 아무개 이념 및 배경의 사학)을 비판하는 행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열거된 이데올로기적 비판논문들에서 주로 언급된 ‘사이비사학’의 사례들은 학문적 목적보다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 일부 대중 및 종교적 운동들인데, 공격하기 쉬운 허수아비를 세웠다는 느낌을 준다. 한국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이 있는 비주류



연구는 대중적·종교적 운동보다는 최소한의 학술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며,<sup>041</sup> 이들은 대부분 민족주의나 전체주의 같은 이념적 편향을 표방하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정설보다 한국의 영토를 훨씬 크게 그리는 역사지리가 한국의 민족주의와 상관이 없는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경우도 유의하게 발견된다.<sup>042</sup> 역사지리의 소수설들이 높은 인기를 끄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비판의 대상이 어느 정도 엇나간 점이 있으며, 일반 대중에 대한 그다지 책임 있는 설득 전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국 고대사 논쟁에서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주요 기능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념적 선호를 따라 고대사 및 역사지리 논쟁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비전문가들의 지지를 결속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전통적으로 영토 확장적인 소수설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일부 대중사가들이 사용해온 전략이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반감을 일으키는 정치사상 중 하나는 일제의 식민주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고대사 학계에 내려오는 식민사학과의 연계성을 때로는 그럴듯하게, 때로는 부당하게 지적하며 그에 대한 거센 반감을 불러 모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꼭 식민주의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재야학자들에 의해서만 사용된다는 법도 없다. 사회적인 환경만 마련되면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매개로도 동일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2015년 고대사 파동 이후 관찰된 주류 학계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일부 재야 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호응해 나선 비전문가들의 글 중에는 고대 역사지리에서 주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싸잡아 ‘매국노’라고 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사

이비사학'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들의 논조가 기존에 '매국노'들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던 비전문가들의 논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재야 성향의 비전문가 논객들이 '매국노', '식민사학자'라는 표지를 사용하여(주류 학계에 유의미하게 실재한다고 가정된) 식민지 유산을 규탄하였듯이, '사이비사학자'라는 말로 역사 연구에서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규탄하고 있다.<sup>443</sup> 기존 이념적 감정에 따라 특정 성향이 있다고 지목된 연구자들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표출하는 비전문가 우군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한국의 고대사 갈등의 현실에서 가지는 핵심적 역할이라고 유추하게 된다.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가 이념적 선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 용어가 어째서 최근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는지 역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과거 한국 진보는 제3세계 반제민족주의운동의 성격이 강했으며, 보수 역시 군사독재 정권에 부여하는 전체주의가 지도적 이념이었다. 이 둘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그 뜻이 다소 갈리기도 하였지만 어느 쪽이든 일제시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정립된 역사지리적 프레임을 의심하며 한국 역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려는 시도를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여남은 해 동안 상황이 변하였는데, 1980년대부터 서양 인문사회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이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반민족주의(anti-nationalism)가 한국 사회에 유의미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설 자리가 없었던 반민족주의는 이제 서구 좌파를 복제한 한국의 새로운 좌파 운동과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자들 양쪽에서 강력한 정치 이념적 기반을 얻게 되었다. 일반 대중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국수주의에 대한 비칭 성격의 신조어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주요 언론을 통한 이념적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 연구자들이 이념적 공세를 힘차게 벌이게 된 것은 한국 사회 전반의 정치 이념적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사이비사학'이라는 용어의 급속한 부상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국 고대사 분야에서 '주류 학계'가 하나의 느슨하지만 실재하는 집단이라면, 그가 식민주의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일부 재야사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일방적으로 언어맞아 온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제도권 학계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일정한 역사학적 편견이 실제로 있든 없든, 전문 학술 연구가 정치적 완력에 크게 휘둘리는 상황은 '주류 학계'의 집단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식의 탐구라는 사회적 선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많은 학자들이 각종 소수 역사지리 학설들에 대해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등을 이용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가열차게 가한 것은 당장의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념적 호소로 대중적 지지를 모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치 적에게 공격받아 흘린 피를 급하게 채우기 위해 나쁜 피를 수혈하는 것과도 같다. 단기적인 자기방어에는 큰 도움이 되나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고대사 담론을 경영해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학설에 대한 지지를 정하는 비전문가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이 한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장기적으로 추구할 만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결론

이 글은 최근 많은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이비사학’이라는 지칭이 한국의 고대사 논쟁의 현실에서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며, 상당한 인식적·실용적·윤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본문 첫 장에서는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한국사의 시공간적 범위를 크게 그리는 비주류학설을 지시하는 말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이것이 ‘사이비사학’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지시 범주의 어긋남이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지식의 진보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문 둘째 장에서는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이 촉발하는 비주류 학설에 대한 학문적 무시와 그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원심력은 지적으로 책임 있는 비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목적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문 셋째 장에서는 ‘사이비사학’이라는 말이 논쟁의 이데올로기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토론 상대와 지적 비전문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이념적 감정들을 이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결속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도권 역사 연구가 부당한 정치적 완력에 의해 더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당장의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적 대중에 대한 바람직한 설득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고대사 갈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중사가들의 행동을 먼저 규탄할 수도 있었으나, 필자는 그들의 학문적으로 적절치 못한 토론 태도에 대해 근 몇 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회답하였던 제도권 학계 일부 연구자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

진 반민족주의를 매개로 한 이데올로기적 비판들은 언론계와 지식 사회에서 적지 않은 이념적 지지자를 결집시켰으며, 앞으로는 과격한 대중 역사 단체들이 '식민사학'이라는 낙인을 사용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정치권에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사이비사학이라는 학문적으로 부적절한 용어를 지금처럼 널리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부적절한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역사적 지식의 탐구라는 인식적 목적의 추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에 대한 효과적이며 윤리적인 설득도 기대할 수 없다. ㉮

#### 테이 정(Tay Jeong)

역사사회학, 지식사회학, 그리고 사회과학철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이다. 한국의 고대사 갈등에 관한 논문으로 "The Politics of Historical Knowledge: The Debate 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Old Choson and the Han Commanderies"를 썼다. jeong.tay@gmail.com

## 주

- 001 기경량, 「사이비역사학과 역사 파시즘」, 『역사비평』 114, 2016. 저자가 제시한 구체적 증거로부터 이덕일의 연구가 수준미달이라는 결론을 유효하게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글의 논지와 관련이 없으며 따로 논평하지 않는다.
- 002 이경섭, 「기로에 선 한국 고대사 연구와 전망」, 『역사학보』 235, 2017, 44쪽; 김종일,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요서 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 2016. 10. 8, 16쪽.
- 003 기경량, 앞의 논문, 220쪽, 235쪽.
- 004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동북아역사재단 될 것」, 『연합뉴스』 2018. 2. 22.
- 005 강진원, 「한국과 중국, ‘국뽕’은 통한다」, 『한겨레21』 1167호, 2017. 8. 21.
- 006 Avizer Tucker, *Our Knowledge of the Past: A Philosophy of Histor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Frank Ankersmit, *Historical Represent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007 Tucker, op.cit.
- 008 박노자,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 2010.
- 009 Bedford, D., “Agnotology as a teaching tool: Learning climate science by studying misinformation”, *Journal of Geography*, 2010; Bedford, D. and Cook, J., “Agnotology, Scientific Consensus,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Climate Change: A Response to Legates, Soon and Briggs”, *Science & Education*, 2013; Legates, D., Soon, W., and Briggs, W., “Learning and Teaching Climate Science: The Perils of Consensus Knowledge Using Agnotology”, *Science & Education*, 2013; Mann, M., *The Hockey Stick and the Climate War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 010 필자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Jeong, Tay, “The Politics of Historical Knowledge: The Debate 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Old Chosŏn and Lelang Commandery”, *Journal of Asian History*, 2018, 43~82쪽.
- 011 李丙燾, 「浪水考」, 『靑丘學叢』 13, 靑丘學會, 1933, 111쪽.
- 012 강진원, 「식민주의 역사학과 ‘우리’ 안의 타율성론」, 『역사비평』, 115, 2016, 228쪽; 이정빈, 「한사군, 과연 난하 유역에 있었을까?」, 『역사비평』 115, 2016.
- 013 안정준, 「오늘날의 낙랑군 연구」, 『역사비평』 114, 2016; 조인성, 「李丙燾의 한국 고대사 연구와 식민주의 사학의 문제—『韓國古代史研究』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4, 2009.
- 014 위가야, 「한사군 한반도설’은 식민사학의 산물인가」, 『역사비평』 114, 2016; 조인성, 앞의 논문.

- 015 정인성, 「고고학에서의 낙랑군 연구」, 『낙랑고고학개론』, 진인진, 2014; 『韓國考古學史에서 ‘原三國時代’와 김해패총』, 『先史와 古代』 46, 2015; 정원주, 「7세기 고구려의 서계(西界) 변화—고구려의 요서(遼西) 진출과 당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8, 2014.
- 016 Pai, Hyung-il,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0.
- 017 심재훈, 「한민족의 형성과 동아시아」, 『사학지』, 39, 2007, 18쪽.
- 018 이도학, 「樂浪郡의 推移와 嶺西地域樂浪」, 『東아시아古代學』, 34, 2014.
- 019 공석구, 「秦長城東端인 樂浪郡 遂城縣의 위치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81, 2016.
- 020 오영찬, 「낙랑군 출토 봉니의 진위에 대한 기초적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88, 2015; 정인성, 「일제강점기 토성리토성(낙랑토성)의 발굴과 출토 유물 재검토—봉니와 낙랑예관을 중심으로」, 『2016년 상고사 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2016.
- 021 2016년 제1회 상고사 토론회. 동북아역사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를 시청할 수 있다.
- 022 Goldman, A., “Experts: Which Ones Should You Trust?”,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63, No. 1, 2001.
- 023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광개토대왕과 집안을 시공간적 기준점으로 잡고, 삼국사기 고구려 도성 이동과 관련된 기록 가운데 그 바로 전 기록인 移居平壤東黃城을 근거로 집안을 황성으로 해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해석이 분분하던 동천왕의 평양을 묘사 지리지의 “桓州 高麗中都城… 五世孫釗 晉康帝建元初為慕容皝所敗” 기록에 맞추어 현재의 환인으로 보아 집안 황성설을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하였으며, 집안 ‘국내성’이 4세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굴 성과를 342년 국내성 축성 기사 대신 황성 천도와 결부지어 해석하였다. 복기대,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단군학연구』 22, 2010; 「고구려 황성 시대에 대한 시론」,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2016.
- 024 복기대,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2010; 「고구려 평양 위치 관련 기록의 검토—일본학자들의 장수왕 천도설에 대한 재검토」, 『일본문화학보』, 69, 2016; 남의현, 「1930년대 『奉天通志』에 기록된 高句麗와 隋 전쟁 소개」, 『江原史學』 28, 2016.
- 025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편, 『압록과 고려의 복계』, 주류성, 2017이라는 연구총서로 간행되었다.
- 026 통용되는 역사지리적 가설들과 비교적 호환성이 높은 집안 황성설의 경우, 예를 들면 양시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2014; 이도학, 「『三國史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 『韓國古代史研究』 79, 2015; 노태돈,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韓國古代史研究』 68, 2012; 이정빈, 「고구려의 국

내성·환도성과 천도」, 『韓國古代史研究』 87, 2017 등에서 무리 없이 언급할 만한 내용적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요양 평양설이나 고려북계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지리적 프레임과 다소 큰 간극이 있어 일반적인 연구논문에서 인용 및 언급이 쉽지 않은 점이 있겠으나, 적어도 임나일본부설이나 낙랑군 재요서설과 같이 따로 기회를 내 논평할 여지는 충분하다.

- 027 『민중의소리』, 2017.11.06.(<http://www.vop.co.kr/A00001220759.html>).
- 028 장미애, 「민족의 국사 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4·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17, 2016, 263쪽.
- 029 위의 논문, 265~266쪽.
- 030 노태돈, 「근대사학의 형성과 한국 고대사 연구」, 『우리시대의 한국 고대사』 1, 주류성, 2017, 10쪽.
- 031 김기섭, 「백제는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였을까」,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2, 주류성, 2017.
- 032 한국 고대사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1920년대 부터 1939년까지 동경대 경제학과 안팎에서 벌어진 高野岩三郎와 大内兵衛를 필두로 한 운동권의 좌파학자 그룹과 그 밖의 보수적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의 싸움이 있다. 다툼의 격화와 더불어 경제학적 사고의 경직화와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주류에 의해 장악된 학과에서는 연구와 교육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거부하는 보수적 편향이 발생했다. Marshall, B., “Academic Factionalism in Japan: The Case of the Tōdai Economics Department, 1919~1939”, *Modern Asian Studies*, 1978.
- 033 이정빈, 「한사군, 과연 난하 유역에 있었을까?」, 『역사비평』 115, 2016; 안정준, 「오늘날의 낙랑군 연구」, 『역사비평』 114, 2016. 이 밖에 연구사적 검토를 통하여 일부 재야 논객들의 ‘식민사학’ 꼬리표를 활용한 거친 형태의 정치적 비난을 반박한 예도 있었다(위기야, 「한사군 한반도설’은 식민사학의 산물인가, 『역사비평』, 114, 2016; 신가영, 「임나일본부’ 연구와 식민주의 역사관」, 『역사비평』 115, 2016). 이들은 영토 확장적 학설들에 대한 실증적 논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류 학계에 대한 지적 대중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정당한 목적의 논문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 034 이승호, 「단군—역사와 신화, 그리고 민족」, 『역사비평』 117, 역사비평사, 2016, 특히 제4장.
- 035 장미애, 앞의 논문.
- 036 기경량, 앞의 논문.
- 037 하일식, 「상고사 부풀리기의 부당성과 위험성」, 『요서 지역의 고고학과 고대사』, 2016. 10. 8.
- 038 김종일, 앞의 논문.



- 039 Bryant, J., "Evidence and Explanation in History and Sociology: Critical Reflections on Goldthorpe's Critique of Historical Sociolog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5, No. 1, 1997.
- 040 Mannheim, K. / L. Wirth & E. Shils, Trans., *Ideology and Utopia*, Routledge & Kegan Paul, 1929(1954), pp. 49~61.
- 041 예를 들어, 김용욱, 『도올의 중국 일기』 2, 통나무, 2015; 김상태,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 책보세, 2013 등에서 확인된다. 전자에서는 윤내현과 윤명철에 의해 제기된 소수학설에 대한 지지가 명시되었으며 복기대, 우실하 등의 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추측되는 부분이 있다. 후자에는 윤내현을 중심으로 리지린과 박선희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다.
- 042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에도 고조선과 낙랑군의 위치에 관해서 西川權, 『日韓古代史ノ裏面』, 偕行社, 1910; 大原利武, 『滿鮮に於ける五郡二水考』, 近沢, 1933 등이 만주로 크게 뻗어 나간 역사지리를 주장한 바 있다. Ledyard는 한무제 당시 낙랑군이 요동에 설치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林沄은 요서 지역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관계가 거의 인정되지 않던 시절 그를 가장 일찍 주장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Ledyard, G.,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林沄,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년 제2기). Beckwith는 고구려가 처음 요하 서쪽에서 발흥하여 기원후 1세기에 요동 깊숙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주장은 남한의 일부 비주류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주장되어왔다(Beckwith, C.,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Brill, 2007, pp. 33~35; 윤내현, 『고조선연구』, 만권당, 1994; 복기대, 「고구려 황성시대에 대한 시론」, 2016, 407쪽). 그는 또한 송서, 남사, 양서의 기록을 토대로 백제가 위진 시기 요서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설을 일부러 비판하기까지 하였다. 영토 확장적 비주류 역사지리 연구와 민족주의라는 사상의 관련성은 흔히 가정되는 것보다 느슨하다고 여겨진다.
- 043 「권력과 사이비 역사가 쓴 '고대사 침탈사」, 『경향신문』 2016. 3. 12; 「사이비 역사학은 왜 위험한가」, 『경향신문』 2016. 3. 12; 「국뽕 3각연대」, 『한겨레』 2017. 6. 19.